

〈선거 공명〉 부재는 국민 주권의 기본적 침해

지난 6월 21일 한국 N.C.C. 임시 실행 위원회에서는 극히 짙막한 성명을 다수로 통과시켰다. 그 성명의 내용은 N.C.C.의 〈교회와 사회 위원회〉에서 기초된 것으로서 6·8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담담한 표현 가운데는 깊은 우려와 국가의 장래에 대한 경교로 일관되어 있다. 그 날 이 성명 초안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통과되어지는 광경을 여기서 상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런 정치적 문제를 다룰 때면 오래 나오는 주장, 즉 교회는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역시 부정 선거 문제는 한 정권의 이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에 대한 시원적 침해〉라는 판단에 기울어져서 이 성명은 다수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 시원적인 침해라는 말은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에서 부정을 한다는 것은 대의 정치의 기본인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시원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훈련과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투표 직전까지의 선거전에서는 갖은 협잡과 공갈, 테마고구,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지마는 일단 투표한 뒤부터 개표까지는 손톱만큼의 부정이나 부정 개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 통치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한 전통처럼 되어 있는데 인

가 늘 자랑으로 삼고 있는 미풍이라고 할 것이다. 과열한 투표전
서 갖가지 불상사가 생겨진다는 것은 선진국가나 후진국에서 어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투표한 결과에
해서는 집권당이라고 해도 얼씬 못하게끔 선거 공무원의 엄정 중
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정 선거는 정치적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위에서 지적
대로 어떤 행정적인 안전 보장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만일 그
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부정 선거의 악순
환은 제거될 길이 없다. 이번 선거가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뒤에는
이러한 개표 사실에 앞서 선거전에서 공무원이 벌써 선거전에 깊숙
히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에서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
청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도 공무원(특히 선거 중에)의 중립
이 보장되어야만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원적인 주권 침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으로 이번 성명에
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혁명의 재평가〉라는 문제이다. 5·16 혁명
직후 한 동안 우리는 혁명 정권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예민한 관
심을 가졌고 또 때로는 지나친 억측으로 비판을 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한국 정치의 역사를 훑어 보면 우리는 이 〈혁
명〉의 이념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타협의 길을
걸어온 사실을 보게 된다.

무릇 어떤 혁명이든 이런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볼 때 운명적인 사실이라고 하겠다. 아니 운

명이라기 보다는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부정과 무능을 부정하고
 꺾기한 혁명 세력이 5년이 지나서 그 부정하던 일을 스스로 범하
 는 일종의 자기 부정의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어 정치
 권력이 지니는 어쩔 수 없는 성격이다. 이 문제는 정치 권력이나
 구조 자체로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도의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정치 권력을 사회 정의와 도덕적 책임감에 기초를 두어
 야 하며……〉라고 한 표현이 함축하는 뜻이 있다. 도의적인 책임
 (accountability)이 결여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정치
 권력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현정권이 목적하고 있는 〈근대화〉의
 도의적인 책임과 이에 따르는 사회 정의 문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기
 보다도 현한국의 교육과 문화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자들의 노력과
 성의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이번 성명의 말미에서 “정부 및 정치인들이 6·8 사태를
 미봉책으로 수습하려는 태도와 국민의 정당한 항의 자세를 버리라”
 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미봉책〉이라는 말은 대단히 흥미있는 표현으로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을 본다. 아마
 도 어느 일정한 항구적인 해결책 없는 눈가림으로 하는 해결을 하
 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신흥 국가의 정책 수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행 착오에는 언제나 〈미봉책〉적인 성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미봉책적인 연속을 세계의 후진 국가에서 예외 없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봉책이 그대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정치 사회적인 여건이 더욱 근본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불상사가 터질 적마다 이러한 미봉책적인 조치가 강구하는데 이에 대한 항의나 비판도 <미봉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 N.C.C.의 사회국에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전례가 있었지만은 한·일 회담이나, 부정 선거에 대한 항구적인 연구 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성명서 발표가 마치 불꽃놀이 행사처럼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지곤 한다. 하비·록스가 <세속 도시>에서 지적한 대로 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혁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 되었다고 할 것이다. 쿠바의 카스트로가 빠티스타 정권을 전복한 직후의 쿠바 내의 진공 상태를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충분히 방향 지시를 해 주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혁명에 대한 신학적인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대의 정치의 위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떤 근본적인 연구와 성찰이 없이 다만 성명서 발표에 그친다면 그것은 행사에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과거에도 늘 정부나 집권당의 미봉책이 그 나름대로 성공했던 것이다.

교회는 다이나믹한 정치 원리 확립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만 이러한 미봉책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미봉책적인 반응을 한다는 비난을 이겨낼 것이다. 그래야만 정치적 동요가 있을 적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사로써 교회의 정치에 대한 발언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는 종래의 고식적인 절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